

노사 평행선 달리는 최저임금... 이번주 최초요구안 나온다

최저임금위 내일 제6차 전원회의
노동계 1만1860원 vs 경영계 동결
노사간 최저임금 격차 약 2700원

이번 주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에 다음 번 전원회의 때 최초 요구안 제시를 주문했다.

노동계는 이미 장외 투쟁을 통해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여겨야 한다고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1860원, 월 247만9000원 수준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시급 9160원인 동결을 주장해 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월 191만4440원이다.

이를 통해 추산한 노사 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청장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

격차는 약 2700원에 달한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급 1만1860원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약 30% 인상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던 2018년 16.4%를 넘어서는 수치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최근 5%를 넘어선 물가 상승세에 있다. 고물가에서 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크게 늘어 저임금 근로자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는 이유에서다.

반면, 경영계는 물가 상승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담도 커져 최저임금을 더 올릴 경우 영세 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경영계가 요구했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번에도 무산돼 경영계는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시장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가 또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도 이날 "생존에 대한 위협"이라며 "최소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하면서 노사 간 최대 쟁점이 됐다. 올해 열린 최임위에서도 심의 초반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내년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상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반대해 왔다.

경영계는 매년 최임위 심의 때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된 것은 최저임금법이 처음 도입된 1988년 한 번 뿐이다.

이번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경영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수소경제 힘주는 尹 정부... 원전 활용 '핑크수소' 주목

'수소법 개정안' 정식 공포 임박
尹 탈원전 백지화로 '핑크' 관심
새정부 청정수소 포함 가능성 ↑

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수소 개발 구상을 내놓으면서 업계의 관심이 다시 '수소'에 쏠리고 있다.

수소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미래 유망 기술로 꼽히며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일 산업계는 최근 의결·개정된 '수소법' 정식 공포를 기다리며 청정수소의 범위를 새 정부가 어디까지 허용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 정부도 수소 경쟁력을 강화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을 공개했



수소인프라 이미지

/현대자동차그룹

다. 다만 수소경제와 탈원전 정책 폐기는 관계성이 짙어 수소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은 6월 초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공포안이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청정수소 정의 및 인증,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등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언급된 청정수소는 '인증받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로, '그린수소'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산업계는 새 정부가 어느 선까지를 청정수소로 인정하고 발표할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새 수소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하게 돼 있어 절차를 거치면 오는 1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대개 청정수소라고 하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하는 '그린수소'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업계에서 지칭하는 수소의 색깔은 생산 방식에 따라 분류된다.

기존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추출한 ▲그레이수소,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개질해 만든 뒤 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로 탄소를 포집한 ▲블루수소, 기존 전력망을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한 ▲엘로우수소,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이용한 ▲핑크수소 ▲퍼플수소 ▲레드수소 등이 있다.

특히 주목도가 높은 수소는 '핑크수

소'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탈원전'을 전면으로 뒤집으며 '탈원전 정책 백지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가지'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는 세 번째 과제로 언급될 정도로 정권 내에서 중요도가 높은 사안이다.

더군다나 이번엔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에는 '원전 경쟁력 강화' 전략과 함께 원전 연계 수소생산까지 언급됐다. 결국 새 정부에서 핑크수소를 청정수소에 포함할 가능성이 짙어진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과제 등을 고려해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늦어도 오는 7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여 '핑크수소'의 활용 범위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내년까지 세계교역 둔화... 韓 수출 약화 우려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우크라이나 사태, 中 봉쇄조치 장기화 등 세계 경제회복둔화 영향 불가피

세계교역 둔화흐름이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를 점차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세계교역 여건 점검 및 평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장기화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둔화될 전망이다. 때문에 세계교역도 개선흐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지난해 세계교역은 글로벌 물류지연

등에 따른 공급차질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중심의 양호한 회복흐름을 지속했다. 올해 들어서는 서비스교역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했지만 상품교역은 증가세가 점차 둔화됐다.

서비스교역의 경우 지난해 더딘 회복세를 보이던 여행서비스가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개선된 영향을 받았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등으로 공급차질이 심화되며 상품교역이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세계교역 관련 주요 여건을 점검해보면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수급 불균형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했다. 이는

소득경로와 금리경로를 통해 세계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실증분석 결과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은 2~5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세계교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곡물가격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향후 세계교역량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교역액도 크게 감소하면서 세계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했다. 중국 정부의 제로코로나 정책 유지로 인한 주요 도시의 봉쇄조치에 따라서다. 향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상승 등으로 소

비회복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코로나 정책 유지로 인한 중국의 교역액 감소는 세계상품교역을 큰 폭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주요국 중심의 방역조치 완화는 공급차질 해소를 불러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품교역이 증가하고, 여행제한조치 해제에 따라 관광 및 여행 운수업을 중심으로 서비스교역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해외여행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성장과 상품교역간 연계성도 약화됐다.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이후 상품교역의 소득탄력성(상품교역 증가율/국내총생산 성장률)

이 하락하는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세계교역이 감소했다. 팬데믹 위기기간중 상품소비 증가로 크게 높아졌던 상품교역의 소득탄력성이 서비스소비로의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맞물려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교역에 미치는 주요 여건을 점검해 본 결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 및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유지 등과 관련된 하방리스크가 크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주요 기관들 역시 세계성장률 둔화와 함께 세계교역 둔화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이러한 세계교역 둔화흐름은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를 점차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백지연 기자 wldu024@